

‘自律’의 해석은 ‘自律的’인가

金 春 燮

(全南大 國語國文學科)

오늘의 大學 문제에 관한 말의 洪水 중에서도 그 으뜸은 아마 ‘自律’이란 그 매우 편리한 말일 것이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學內에서 ‘自律的’으로 해결, 처리되어야 하고, 大學의 自律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文教當局의 ‘변함없는’ 정책이었음이 잘 弘報된 때문일까.

물론, 대학의 이른바 자율성은 그것이 강도 높게 주장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대학의 자유와 권위를 지탱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본질로 인식되어 왔으나, 우리의 경우 특히 이 말이 우리 식(?)으로 개념화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大學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쾌하지 못한 기억들을 재생시키는 연상 매개어로서 抽象化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기억 중의 하나는 ’80년 무렵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84년의 학원 상주 公權力 철수를 둘러싼 그 이전의 상황들이다.

이른바 어용교수 백서가 大學 ‘自律化’의 명분하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행했던 상황이나, 마치 학원내 공권력이 없어진다면 大學의 自律이 다 이루어진 것인 양 自律을 목청 높여 강조한 상황이나 모두 유쾌한 기억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에 와서 自律, 그것울 어느 면에선 斜視하는 풍토로까지 영향을 준 自律의 망령은 이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점이다.

새삼스럽게 自律의 개념을 장광설할 입장도 아닐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더구나 文教行政에 관한 百家爭鳴의 快刀에 附會할 생각은 없다. 진실은 표현이 아니라 진실로 음미하고 실천함으로써만 진실하다. 自律의 의미가, 스스로 판단하여 맞게 행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자율을 해석하는 입장은 저마다 자율적이어서(의도되었음직한 것이긴 하지만) 대학 스스로 판단하여 事案에 맞게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大學의 財政的 自律化나 일반 行政業務의 그것에까지 논급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어두기로 하자. 문제는 교육 환경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교육 현장 문제다. 교육의 현장 문제란 실질적으로 敎學에 관한 문제를 뜻하고 교학 여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大學 定員, 入試制度, 그리고 敎科課程의 어떤 문제들이다.

’60년대초부터 시행된 대학 인구 억제 정책(이후 줄었다가 늘었다가 했으니까 대학 인구 조정 정책이라고 해야 맞겠다)에 의해 大學 定員은 엄격한 제약을 받아 왔고, 入試制度 또한 ’60년대초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완벽한 관주도형 제도의 성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에 비해 교과과정의 문제는 대학내에서의 시행 과정에 있어 비교적 자율성이 부여된 셈이나 이른바 실험대학이란 명분 아래 이수 학점의 대

폭절현상은 단순히 20학점이라는 數値로서는 실감날 수 없는 엄청난 전공 학력 손실을 가져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실험대학의 실시 여부는 대학 자체의 선택적 조건이라는 자율이 허용된 것이었지만, 우리의 대학 현실에서 그것은 官이 주도한 추세의 흐름이자 官給性的 산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대학생 인구 정책 문제로 돌아가 보자. 4·19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학생 인구는 9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4만여 명이나 불어나 13만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정부는 대학생 정원을 7만 5천명 선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이 조정 계획은 결국 실패했다). 이때부터 대학생 인구에 대한(폭넓게는 대학 행정 전반에 관한) 단기적일 뿐인 대책에 의해 정비 작업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대학 '정원령'에 의해 '60년대말까지는 7만 5천명 선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13만여 명 선의 현상 유지는 가능했던 것을 보면 5·16 이후 10년 가까이 관 주도 정책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70년대말 대학생 정원은 33만여 명 선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게 된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수출 산업의 급작한 팽창에 따른 인력 수급의 필요성 등 정원 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질 수 있다. 게다가 일반 국민의 고학력 욕구의 심리적 상승 현상까지 겹친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80년 이후의 정원 정책 자료를 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5~6년 사이에 대학생 총 인구는 일백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어찌 今昔之感뿐이겠는가. 물론, 이러한 대학 정원의 급팽창 현상을 가지고 文教當局만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해방 후 雨後竹筍처럼 돌아난 私學들의 私學으로서의 구실은 財政的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했고 이러한 私學의 욕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강력한 요구로 당국에 전달되었을 터이니까. 大學의 內質化는 다음 일이고 우선 규모의 매머드화만이 대학의 사는 길이라는 教育計劃의 허상 탓이라면 탓이랄 수 있겠지. 高學歷者가 많아지는 것을 또 어찌 나

쁜 일로만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人力이 유일한 밀천이라는, 조금은 처량한 우리 국토의 현실이고 보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데.

그러나, 눈을 강의실 현장으로 돌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목요연해진다. 국민학교 교실을 놓고 콩나물 시루라는 말은 목은 비유다. 대학에서는 콩나물 시루를 '대단위 강의'로 미화한다. 대단위 강의라는 말의 꺾질을 벗기면 '할 수 없이 대단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대단위'라는 인식이 도사려 있다. 좀더 과장 해석하면 대단위일수록 좋다는 식이다. 소단위, 대단위의 수치 개념은 잘 모르겠으나 150~200, 아니 3~400 명을 놓고 강의하는 강의가 대단위 강의로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교수는 고성능(?) 마이크를 들고 강의 아닌 '연설'을 수없이 퍼풀 이해야 한다. 교과 내용의 전달은 커녕 '강의를 통한 학생 지도'는 차라리 幻想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대단위 연설장 강의실은 교양과목만의 해당 사항은 아니다. 적정한 教授의 확보와 시설 확충이 대학생 정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리고 그것은 대학 자체의 책임이라는 의례적인 해명은 의미가 없다. 따져 보면 문교 당국이나 대학 운영자가 다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러한 교육 현장의 난맥상은 진정한 의미의 自律化가 유보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大學의 定員이 首都圈 인구 분산 계획이나 地方大學 育成方案의 특례 형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른 묘방이 없긴 해도 일부 私學의 재정적 후원 방안이 대학 정원에 의존되는 것은 타당할 수가 없다.

대학 정원 문제와 포터 관계에 있는 대학입시 제도는 大學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他律이다. 이 역시 '60년대초부터 수차례 걸친 요철을 거듭해 오면서 철저한 관 주도 계도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생의 입학 선발권을 대학에 맡기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은 여러 면에서 이해될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대학 입시제도가 대학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일괄 권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관료적 獨善이며 근시안적이다. 대학 본연의 자율성의 부여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事案이 반드시 대립적이며 모순적인 관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성이 존중되고 우선된 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생각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대학 자율화가 반드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과장이거나 편견이다. 이른바 배짱지원이나 눈치지원의 비교육적 현상이나 폐해를 새삼 들추어 낼 생각은 없다. 당국자의 생각(그럴 것으로 추측되는)처럼 어떤 형태의 입시제도이건 그 나름대로의 '배짱'이나 '눈치'는 있는 법이니까, '안개지원'이니 '입찰합격'이니 하는 유행어도 그야말로 유행어일 뿐일 수도 있으므로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가장 명백한 사실은 대학 스스로 형편에 맞게 修學生을 선발한다는 대원칙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 大學의 自律이 自律的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존중되어야겠다는 점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 고사→실형적 국가 고사→다시 대학별 단독 고사→국가 고사와 대학별 단독 고사의 병행→국가 고사(학력고사)의 수난을 겪어 왔다. 여기서 굳이 입시제도의 변천사를 '수난'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타 차례의 변천에 대한 우여곡절의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自律에서 他律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에서다. '대학별'에서 관주도형 제도로 이르게 된 저간의 배경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상당한 진통 끝에 실시한 금년의 논술고사 제도 역시 부정적으로 드러났다. 논술고사 답안지를 채점해 본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나칠 정도로 답안이 도식· 획일화된 점에 대한 당혹감이었을 것

이다. 말하자면 예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암기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관주도 제도 자체가 도식· 획일화일진데 답안인들이 개성적이겠는가고 채점자는 오히려 수고를 해야 할 판이다. 대학별 단독 고사 때의 국어 시험 문제 중 작문 문제에서 얻는 효과를 밀둔 셈이다.

현행 학력고사의 장점은 글의 논리상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서 누누이 지적된 대로 대학의 자율을 뛰어 넘을 그 어느 제도도 존재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의문은 항상 남는다.

앞서 시사되었듯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인화된 것 이외에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는 실험 대학의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전공과목 중 일곱 개 과목 정도가 무고하게 삭제당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매우 크다. 140학점 제도는 160학점 제도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교 당국보다는 대학 자체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일견 대학 당국이나 학생에게 모두 편의를 주는 제도로 보이지만 허다한 문제들이 제도는 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大學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自律의 허용이나 확보로 해결될 수는 물론 없다. 또 대학 밖의 안정 없이 대학만의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짧은 文面으로 담을 수 없는 대학교육의 많은 문제들을 책임 없이 지나치거나 제도의 현상 유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적어도 대학의 자율이 한낱 口頭禪으로 허공을 메아리치고 있기에는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大學의 문제는 대학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대학에 맡긴다”는 식의 부담스러운 자율은 자율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쪽만이 아니라 문제의 제기까지를 모두 포함한 자율이 대학의 자율이다.*